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충남이 제안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월 19일 도청에서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와 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 6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방정부로는 극히 이례적인 정책담론 연구는 국가 정책의 산출·집행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시행, 정부 부처 등의 차별성 없는 유사·중복 사업 양산 등 국가정책 수립단계에서의 지방 소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또 국가, 시·도, 시·군의 역할 분담을 통

한 국가 경쟁력 제고, 성장에 대한 가치,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사회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도 정책담론 연구 및 제안의 배경이다.

정책담론 연구를 위해 도는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자문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충남발전연구원,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기획단을 꾸리고 분야별 TF팀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신균형발전 정책 첫 머리를 장식한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제안은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가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발전설비는 1만 6,538MW로 전국 1위(19.2%), 석탄화력 설비 역시 1만 2,400MW로 전국 1위(38.2%)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6년 동안 화력발전소 12기(9,490MW)가 도내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또 도내 생산 전력의 63.8%가 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충남은 수도권의 전력생산기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공급지와 수요지 분리인 송·배전선로 장거리화를 불렀는데, 이는 송전탑 건설 및 운영 비용, 송전 과정 상 손

실비용 증가, 송전선로 인근 주민 재산·건강 피해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도내 송전선로는 1,338km이며, 철탁은 4,141개가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송·배전비용 발생 원인자가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으로, 정책대안 및 제안 사항으로 대기오염, 온배수, 송전선로 등 지역별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체제 도입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여러 나라들은 차등적 전기요금제를 이미 도입·시행 중인데, 미국은 뉴욕과 뉴잉글랜드 전력 시장에서 지역별 요금제를 실시 중이고, 일본은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제도를 통해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②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생태계 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적 공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세계 여러 나라가 활용 중인데, 미국의 경우 '습지 손실 저감 프로그램'

에 따라 연간 11억 18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본 가나가와현은 지난 1974년부터 자연보호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발전이 늦어 주민들의 불편과 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자연 생태계가 주는 각종 효용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훼손 유인은 많은 반면 보전 유인은 부족해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제안이다.

③ '예타' 공정성 확보

예비타당성평가(예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제안은 현재의 예타가 대도시 지역과 낙후지역을 동일 평가기준으로 적용,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꺼내들었다.

도가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190개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사업은 70%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반면, 비수도권은 58.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낙후지역에서도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생각이다.

또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회기반시설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는 농업과 농촌이 식량과 환경 등 연간 1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공재로써의 보상 수준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비농림어업 대비 농림어업 GDP는 1998년 48%에서 2008년 39.4%로,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2003년 76.4%에서 2012년 57.6%로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는 농업·농촌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내놓은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제안은 각종 농업 직불금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상 및 지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개선안은 농업·환경·농촌 등 3개 축으로 나뉜다.

제1축인 농업은 식량 자급률 향상과 후계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고정직불 증가, 45세 미만 신규 취농·귀농자 대상 직불금 프로그램 제공 등의 안을 제시했다.

제2축 환경은 농업생태·농촌경관 보전 및 유지를 초점으로,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에 대한 직불금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3축인 농촌은 초점을 농촌공동체와 일자리 창출 등 안전망에 두고 공공사업 일자리 제공 등을 안으로 내놨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4조 2000억 원 5조 1000억 원 가량으로, 1축은 기존 농업예산을 리모델링하고, 2·3축은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농촌 관련 예산을 협력적 집행방식을 통해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역시 외국 주요 국가에서 운영 중인데, 일본은 올해 산업정책 차원의 경영소득안정대책을 축소하는 대신 지역정책 차원의 '일본형 직접지불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스위스는 지난해부터 농업예산 80%에 대한 직불제 예산 편성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⑤ 송·배전시설 주변 피해보상

송전선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던 지난해 12월 국회는 765kV 송전선의 경우 33m(주택 180m)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을 통과시켰다.

도는 그러나 송주법의 보상 대상 및 범위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재산피해를 조사한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제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이미 건설·운영되고 있는 송전선로 주변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보상 제안은 송주법 개정을 통해 주민 피해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 지역 피해 보상 명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⑥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은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부터는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돼 지방대학 피폐화가 우려됨에 따라 낸 제안이다.

현재 수도권 대학생 수는 77만 1,000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법령의 특례조항으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이 허용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에서는 청운대가 이달 인천캠퍼스 문을 열어 물류학과 등 10개 학과 1,500명이 빠져나가고, 중부대는 내년 3월 공과대 등 2계열 24개과 3,460명 규모의 고양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지역 대학들도 수도권 내 이전을 추진 중으로 알려 졌다.

도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계속 허용될 경우 지방은 인재 양성 기반을 잃고, 인력 유출이 가속화 돼 지방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며, 대학 주변은 상권 붕괴 및 공동화로 주민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교통부)을 수도권 내 학교만 수도권 내 신·증설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전행정부) 역시 수도권 내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학교의 이

전 등에 관한 특례조항' 개정을 정책대안 및 제안 사항으로 내놨다.

한편 도는 나머지 정책담론 5개 분야도 내용이 최종 정리 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충남 공공디자인 컨트롤 타워 개소

- 도 공무원교육원과 충발연에서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개소식



충남도는 3월 7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 행복공간 조성 및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설치되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현재 혼재돼 있는 도와 시·군의 디자인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디자인을 통해 아름답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축하내빈과 디자인 관련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설립을 축하하고 명품 디자인 충남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다.

충남 공공디자인센터는 앞으로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수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도내 민·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지원 ▲디자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2014년 사업으로 도내 15개 시·군에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센터는 연내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적·지역적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센터장을 포함해 전임 책임연구원 1명과 전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등 연구원 4명을 보강하고, 디자인 분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센터를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내년 정부예산 4조700억 ‘확보한다’

- 정부예산 확보 전략회의 개최...연초부터 총력 대응체제 가동키로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4조 700억 원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



한다.

도는 3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대책 보고 및 토론을 가졌다. 내년 목표액은 올해 확보한 4조 325억 원보다 375억 원 많은 금액으로 국가 시행 사업 1조 3,347억 원 지방 시행 사업 2조 7,353억 원 등이다.

주요 사업 및 목표액을 실·국별로 보면 기획관리실은 16건 4,515억 원으로 ▲도서 종합개발 사업 843억 원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 830억 원 ▲국방대 이전 1,300억 원 ▲경찰대 이전 1,255억 원 등이다.

경제통상실은 ▲수생 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조성 62억 원 ▲유연 전자산업 육성 30억 원 ▲동물약품 허브 조성 62억 원 등 29건 2,731억 원 안전자치행정국은 ▲도내 전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10억 원 등 14개 사업 60억 원을 목표로 잡았다.

또 문화체육관광국은 ▲만리포 관광 거점 조성 29억 원 등 82건 949억 원을 농정국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130억 원 ▲예당지 물넘

이 치수능력 증대 134억 원 등 143건 5,112억 원을 복지보건국은 ▲노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 35억 원 ▲충남 보훈공원 조성 25억 원 등 141건 1조 1,829억 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환경녹지국은 ▲기상청 내포기상대 유치 60억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118억 원 등 66건 4,623억 원을 건설교통국은 ▲서해선 복선전철 750억 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 100억 원 등 69건 9,158억 원을 해양수산국은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사업 85억 원 ▲내수면 생태목장 조성 사업 24억 원 등 55건 1,185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밖에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2건 60억 원 소방본부 6건 43억 원 농업기술원 20건 230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13건 16억 5,00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실 19건 188억 원 등을 각각 목표로 세웠다.

내년 목표 달성을 위해 도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부처 업무보고 등을 분석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은 2년 목표로 추진하며 신규 사업 발굴 및 타당성 논리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108명 선정

- 자금·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제공
지역리더 육성 추진

충남도는 3월 2일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 '20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108명을 선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용자하는 등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지난해 12월 신청을 받아 시·5군의 1차 심사와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의 전문 평가심사를 거쳐 선발한 우수 인재들이다.

도는 이들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지난 1981년부터 매년 우수 농업인을 선정, 자금 지원 및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하고 우리 농업의 글로벌화로 추구하는 인력 육성 시책 주력사업이다.

그동안 도는 1만 2,550명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농업현장에서 전문 농업인 및 지역 리더로 활동 중이다.

서해 수산자원 풍부한 '황금어장' 만든다

- 올해 인공어초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132억 원 투입

충남도는 올해 서해바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 사업, 연안바다목장조성 사업, 수산종묘방류 사업, 바다숲조성 사업 등 4개 부문에 132억 원을 투자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